

제2공항, 공은 이제 국토교통부로...

원희룡·좌남수 19일 현명한 결정 촉구 입장문
 “제2공항 갈등 마침표 찍고 도민 통합 이뤄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다음날 입장을 발표해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5면
 원 지사는 지난 19일 서면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사결과는 제주도의회의와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국토부에 충실히 전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또한 전달된 도민의 뜻을 존중해 책임있는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도민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종식시키고 도민통합을 위한 일에 나서야 할 때”라며 “제주사회 미래 발

전을 위한 길에 도민사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설 수 있게 제주도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지사와 좌 의장은 여론조사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설 언급하지 않고 국토부의 몫으로 돌렸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반대 의견이, 성산주민들은 찬



하얀 꽃망울 터트린 목련 며칠째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21일 서귀포시 이충섭미술관에 봄소식을 알리는 목련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려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를 두고 제2공항 찬반 단체 별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던 국토부가 판단의 공을 오히려 제주도에 돌릴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을 토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가능한 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

와 있는 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2공항 기본계획은 현재 고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 이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강충훈 제주도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좌남수 의장이 “전체 도의원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도의회 명의로 제2공항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4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넓고 두텁게” 문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서 피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었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달 초 국회에 관련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원금 수준을 최소 20조원대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수준인 12조원을 고려하고 있어 지원금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또한 당에서 적극 나서주고 있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에 두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를 같이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년 대선 출마를 위해 내달 7일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6385@ihalla.com

4·3특별법 개정안 금주 ‘운명의 시간’

25일 법사위서 의결되면 26일 본회의 상정
 73주년만에 유족들 최대 숙원 해결 계기

이번주 국회에서 제주4·3이 ‘운명의 시간’을 맞는다. 제주4·3 73주년만에,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만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 조치가 담긴 전면 개정안이 국회 논의 최종 문턱에 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법사위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개정안은 내달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간 정치적 현안들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법사위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이날 심의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자칫 법사위에서 의결이 미뤄질 경우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워진다.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순조롭게 의결되면 마침내 국회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만 남겨두게 된다.
 제주4·3특별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희생자 유족들의 최대 숙원으로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디딤돌을 만드는 역사적인 날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부미현기자 bu6385@ihalla.com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도, 올해부터 제도 시행...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돕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을 8%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창업제품 조달 우대를 할 수 있으며, 도내 창업기업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창업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임을 확인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을 높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유관기관 구매 협조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 창업확인서 발급을 받은 창업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창업기업의 생존을 제고 및 성장기반을 마련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에 포함된 공공구매부문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4개 항목이며, 창업기업제품이 추가되면서 5개 항목이 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2공항 반대

제주도민의 위대한 선택

결국 제주도민은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4·3을 이겨낸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제주도민의 삶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희망한 것입니다.
 제주도민 스스로 우리 삶의 방식과 방법을 결정한 것입니다.

제주도민은
 새로운 제주를 선택했습니다.

